

코로나19 사태의 원인과 전망

전염병 발발부터
경제위기 확대까지



사회진보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코로나19 사태의 원인과 전망

전염병 발발부터 경제위기 확대까지

소책자를 발간하며

“상황을 낙관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전에는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다가,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부활절이 되기 전에는 석방될 거라고 믿음을 이어 나가고, 부활절이 지나면 추수감사절 이전엔 나가게 될 거라고 또 믿지만, 그렇게 다시 크리스마스를 맞고 반복되는 상실감에 결국 죽게 됩니다. 이긴 아주 중요한 교훈인데요, 마침내 이기겠다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과 지금 현실의 가장 가혹한 사실을 직시하는 것을 절대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 스톡데일 패러독스(Stockdale Paradox)

코로나19가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4월 3일 현재 확진자가 1백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도 5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감염 검사 범위의 한계와 주변부 국가들의 보고 누락을 고려하면 이 수치는 실제로는 몇 배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건강만이 아니라 경제에도 심각한 위기를 유발했습니다. 방역 조치로 시민의 이동이 제한되고, 심지어 도시가 봉쇄되기도 하면서 생산과 소비 모두 치명타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실업자는 단 2주 사이에 1천만 명이 증가했고, 방역이나 경제 사정이 상대적으로 낫다는 북유럽 국가들마저 실업률이 두 배 이상 상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쉽게 종식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내 치료제가 나올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고, 더구나 백신은 몇 년이 걸리는데, 그마저도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 개발 가능성이 불확실합니다. 경제침체는 더더욱 빠른 시간 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경제가 이전부터 심각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지난 12년간 세계경제는 겉으로만

덜짱해 보였지 속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낙관적 생각이 오히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부릅니다. 베트남전 때 하노이 포로수용소에서 10년 가까이 세월을 보내고도 살아남은 스톡데일 장군의 이야기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그는 현실적인 비관주의자보다 비현실적 낙관주의자가 오히려 포로수용소에서 적게 생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치료제가 곧 개발되고, 경제는 V자로 회복될 것이라 전망하는 사람들, 이번 사태를 기회로 과학적 타당성이 없는 자신의 주장을 정부정책으로 관철하려는 사람들, 위기론이 과장이라며 이전처럼 하던 대로 하자는 사람들 모두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의 비현실적 낙관주의자일 것입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이 소책자에서 오늘날의 세계의 처참한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선부른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현실적 비관주의자로서 세계를 바라보고자 합니다. 우선 냉철하게 현실을 분석한 후, 차후에 코로나 이후 세계의 대안을 제시해보려 합니다.

2020년 4월 6일

사회진보연대

차례

소책자를 발간하며 -----	4
서문.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자본주의의 민낯 -----	8
1부 감염병	
1장. 무분별한 야생동물 사육과 중국의 탐욕스런 경제 -----	12
2장.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과 방역조치 효과 -----	15
3장. 강력한 방역조치, 언제까지 지속해야 하나 -----	18
2부 정치	
4장. 반세계화 포퓰리즘과 감시통제 사회의 도래 -----	22
5장. 포퓰리즘 정치는 어떻게 코로나 위기를 키우는가 -----	26
3부 경제	
6장. 코로나19가 악화시킨 세계경제의 기저질환 -----	31
7장. 바이러스는 평등해도, 사회는 평등하지 않다 -----	35
8장. 재정 중독과 현금 송배에 빠진 세계는 지속가능한가 -----	37
9장. 포퓰리즘적 현금 지급 정책을 경계한다 -----	42
10장.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 전망 -----	46
4부 사회운동	
11장. 사회운동의 긴급한 요구 -----	51
12장.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이제 자본주의 변혁에 대해 이야기하자 -----	57
[별첨1] 각국의 재정·통화정책(2020년 3월 말 현재) -----	62
[별첨2] 한국정부의 대책(2020년 4월 1주 현재) -----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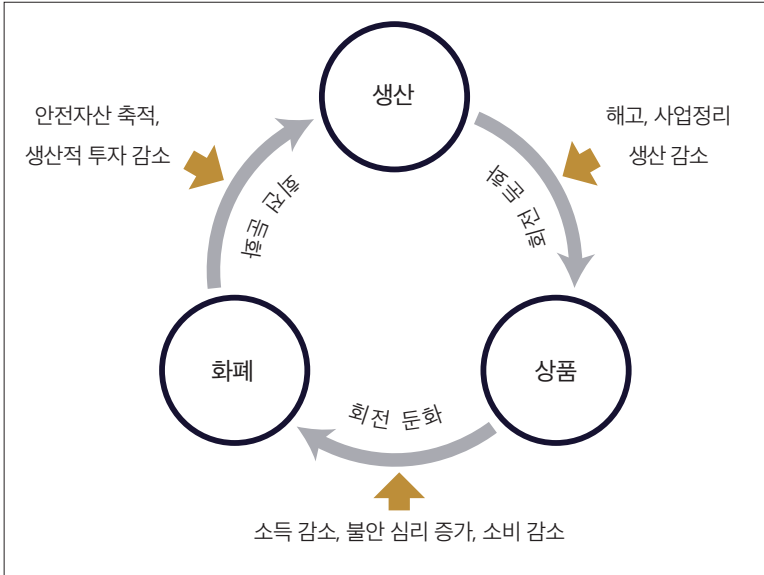
서문

서문.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자본주의의 민낯

최근의 혼란은 자본주의 경제의 작동 방식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발병 원인은 이윤에 눈이 먼 야생동물 산업의 무분별한 확대였다. 경제 위기는 생산자원이 있어도 돈이 안 돌면 생산을 멈추는 시장경제의 특성 탓에 커졌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하늘에서 느닷없이 떨어진 재앙이 아니다. 이윤 추구의 자본주의 경제가 만들어 낸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이러스의 발원지는 야생동물이다. 중국에서 박쥐나 천산갑 같은 야생동물을 사육해서 먹다가 바이러스가 창궐했다. 야생동물을 먹는 것은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중국의 오랜 식습관이다. 그런데 이전에 없던 전염병이 오늘날처럼 퍼지게 된 것은 고도성장과 함께 야생동물 산업도 양적, 질적으로 급성장했기 때문이다. 이제 야생동물은 농촌 주민이 시골 시장에서 거래하는 수준이 아니다. 국내총생산에 잡힐 정도로 돈이 되는 대규모 산업이다. 경제성장에 '올인'한 중국 당국은 이런 야생동물 산업을 방치해왔다. 그리고 그만큼 전염병이 발발할 가능성도 커졌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한 후 발생한 경제적 대혼란도 자본주의 특성과 관련이 깊다. 한번 생각해보자. 방역으로 이동 제한과 지역봉쇄가 불가피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경제적 위기가 크게 발생할 이유가 사실은 없다. 인명 피해가 발생했지만, 그렇다고 생필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생산에 필요한 설비가 파괴된 것도 아니니 말이다. 감염자들을 치료하면서, 소비 방식을 잠시 바꾸고, 사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생산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오늘날 경제는 방역과 함께 경제 전체가 위기에 빠졌다. 이유가 무엇일까?



자본주의 경제의 돈의 순환과 코로나 사태가 미친 영향

간단하다. 자본주의 경제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 생산이 조직되는 체계가 아니라,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 시장에서 생산을 조직하는 체계이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돈이 돌고, 기업이 돈을 벌어야 생산도 조직되는 체계가 바로 자본주의이다. 방역으로 기업 이윤이 하락하면, 아무리 사회적 필요가 있어도 생산이 이뤄지지 못한다.

자본주의 경제는 돈이 도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돈(화폐)이 생산에 투자되고, 생산으로 상품이 만들어지고, 상품이 판매되어 처음보다 더 큰 돈이 투자자에게 되 돌아온다. 돈에서 시작해 돈으로 끝나는 것이다. 이것이 자본주의 생산의 작동방식이다. 그런데 이런 돈의 순환으로 움직이는 경제는 코로나 방역 같은 외부 충격에 쉽게 위기에 빠진다. 아래 그림은 방역에 따른 돈의 순환이 어

떻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보여준다.

먼저 물리적 거리두기로 일반 소비재 수요가 급감하고, 이어서 기업 투자 위축으로 자본재 수요도 급감한다. 상품이 돈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다음은 화폐가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는 단계에서 문제가 또 발생한다. 불안감으로 실물 투자 대신 안전 자산 위주로 투자하기 때문이다. 달리 같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대표적 예다. 한국의 경우 서울 부동산이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생산에서 상품으로 이어지는 단계에서도 문제는 이어진다. 기업들이 미래의 수요 감소를 예상하고 사업을 축소하거나 노동자를 대규모로 해고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본주의 경제는 코로나 사태와 같은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하다. 돈이 돌지 않으면 경제 자체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돈은 방역을 끝내야만 재순환이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의 의학으로는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돈으로 조직되는 경제는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본주의 그 자체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봐야 하는 이유다.

1부

감염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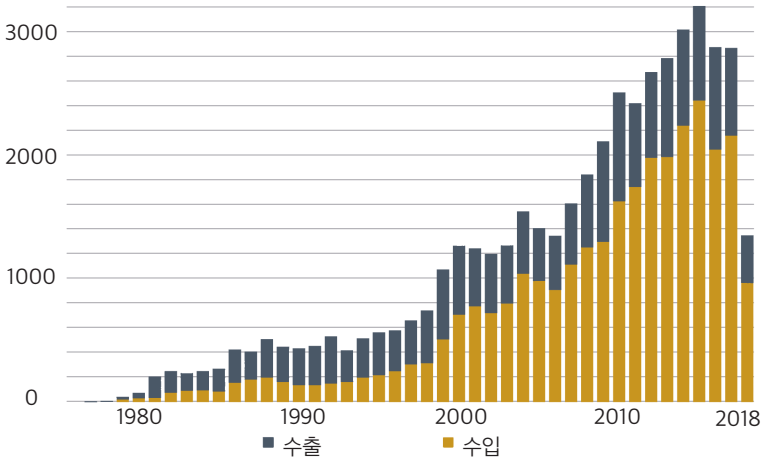
1장. 무분별한 야생동물 사육과 중국의 탐욕스런 경제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야생동물 사육산업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적절한 생태·안전·보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신종전염병은 재차 창궐할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디서 왔을까? 현재로서는 야생동물일 가능성이 크다. 2003년 사스 때는 박쥐에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사향고양이의 몸에서 변이를 일으킨 후 인간에게 감염되어 유행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천산갑 같은 야생동물이 중간 숙주 역할을 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이 야생동물을 섭취하는 중국의 문화적 전통 탓에 코로나 19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이 전통은 왜 하필 2000년대 들어 사스나 코로나19와 같은 대유행을 일으켰을까?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야생동물을 얻는 방법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핵심 요인은 ‘먹는 관습’이 아니라, ‘포획에서 사육으로의 전환’이다. 우한 수산시장에서 거래되는 야생동물은 통념과는 달리 야생에서 포획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농장에서 기른 것이다.

중국에는 야생동물 사육과 가공 산업이 번성하고 있다. 2006년 기준으로 야생동물 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1만 9천 개나 존재했다. 이렇게 사육된 야생동물은 중국 내에서 소비될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로 수출된다. 야생동물은 식용, 약용, 장식용, 애완용으로 쓰인다. 특히 중국 내에서는 소득 수준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야생동



중국의 야생 동물 수입과 수출 기록(연도별 거래 수)

물을 많이 소비한다. 야생동물 요리는 사업 접대 자리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며, 야생동물 상품이 뇌물로 쓰인다는 이야기도 많다. 따라서 교육 수준이 올라가거나 경제가 성장하면서 야생동물 소비가 감소할 거라는 예측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것은 주로 소규모 자작농들이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 소농들은 주로 축산업에 종사해왔다. 그런데 1990년대 들어 중국 거대기업들이 축산업 분야를 완전히 장악했다. 일거리가 잃은 소농들은 야생동물 농장을 시작했다. 사육한 야생동물은 주로 우한 수산시장과 같은 윗마켓(wet market)에서 산 채로 판매한다. 윗마켓은 동물을 산 채로 판매하고, 그 자리에서 도살 및 가공해주는 시장이다. 도살과 가공에 관련한 시설이나 대형 슈퍼마켓 유통망은 전부 축산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소농들은 윗마

켓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야생동물 농장이 증가한 또 다른 이유는 중국 정부의 야생동물 사육 장려 정책이었다. 명분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야생동물 불법 남획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야생동물 사육산업은 바이러스의 변이와 전파를 촉진한다. 원인은 세 가지다. 첫째, 특정 종의 야생동물이 한정된 공간에 집적되면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된다. 야생동물 사육농장이 생기면 자연의 야생동물, 사육되는 야생동물, 가축, 인간 사이의 바이러스 교류와 변이의 빈도가 증가한다. 예컨대 멍크 농장 근처에 박쥐 서식지와 돼지 농장, 마을이 공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둘째, 유통 과정에서 바이러스 변이 빈도가 증가한다. 윌마켓에는 살아있는 여러 야생동물과 가축들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셋째, 사육농장 주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종을 찾아낸다. 야생에 가까울수록 더 비싸게 팔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종이 어떤 병원체를 가졌는지 알지 못한다.

야생동물 사육산업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을 키운다. 최근 발생하는 신종전염병의 60%는 동물에서 온 것이며, 그중 71%는 야생동물에서 유래했다. 야생동물 서식지는 계속 파괴되고, 동물과 인간 모두 과거보다 훨씬 더 집적되고 연결된 공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변이와 전파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중국 정부가 적절한 생태·안전·보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신종전염병은 재차 창궐할 가능성이 크다.

2장.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과 방역조치 효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방역조치를 무력화하는 특성을 가졌다. 따라서 완벽한 방역조치를 해도 유행을 막기 어렵고, 유행 진압에 성공해도 하반기에 다시 유행할 가능성도 있다.

왜 코로나19는 2003년 사스와 달리 많은 국가가 초기 확산방지에 실패했을까?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신종감염병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방역조치다.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방역조치를 무력화하는 특성을 가졌다.

코로나19는 사스와 결정적인 차이점이 두 개 있다. 첫째, 코로나19는 증상이 나타난 초기에 바로 전파가 가능하다. 코나 입에서 배출되는 바이러스 농도가 증상 시작 시점에 가장 높기 때문이다. 심지어 잠복기 동안에도 전염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둘째, 코로나 19는 경한 증상만 나타내거나 아예 무증상인 환자가 많다. 전체의 80%가 경한 증상만 호소한다. 경한 증상은 감기와 비슷한데, 기침을 하므로 전파가 가능하다. 무증상인 환자는 대체로 전파력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무증상이면서도 많은 사람을 감염시킨 사례도 존재한다.

방역조치를 전략과 전술로 나눠 보면, 크게 두 가지 전략과 다섯 가지 전술로 정리할 수 있다. 신종감염병이 출현했을 때, 처음에는 확산방지(containment) 전략을 쓰다가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확산지연(mitigation)과 보호(protection) 전략으로 전환한다. 확산방지 전략은 격리(isolation), 밀접접촉자 추적 및 활동제한(quarantine) 전술이 중심이다. 확산지연과 보호 전략에서는 사회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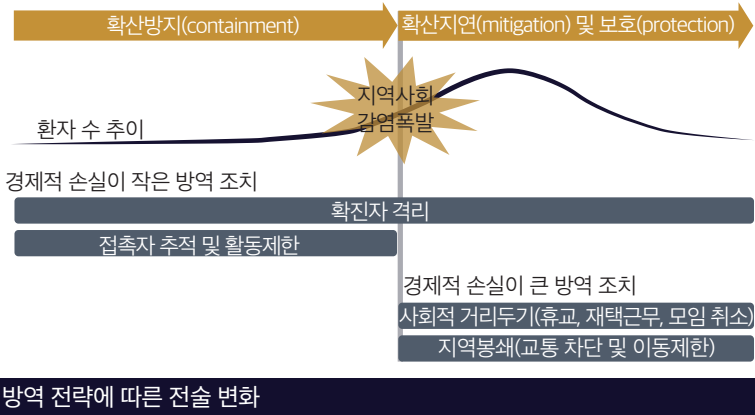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지역봉쇄(lockdown), 취약집단 보호가 핵심 전술이다.

격리는 감염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비감염자에게서 떨어뜨려 놓는 것이다. 주로는 병원에 격리하나, 병상이 모자라고 증상이 경하면 집이나 지정된 시설에 격리할 수도 있다. 활동제한은 감염자와 밀접접촉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지만 발병하지 않은 잠복기 동안, 이동을 제한하면서 체온 측정 등 의학 적 관찰을 병행한다.

사스는 잠복기 동안에는 전염이 되지 않고, 증상 발생 후 6~11 일 기간 동안 전파력이 높다. 따라서 격리와 활동제한만으로도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전파가능한 무증상, 경증 환자가 검사를 받지 않아 진단이 안 된다. 방역조치를 뚫고 지역 사회에서 유행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완벽한 방역조치를 한다고 가정해도, 약 40%의 국가에서는 유행이 발생한다는 게 역학자들의 연구 결과다. 또 상반기에 대유행을 겪은 국가가 방역조치로 유행 진압에 성공해도, 하반기에 다시 유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도 많다.

이는 출입국 시의 방역조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설상가상으로 중국 정부가 초기 대응에 실패한 탓에 우한과 후베이성 일대를 봉쇄한 시점에 이미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중국 전역과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간 상태였다. 1월 초부터 모든 출입국 절차를 중단하지 않은 한, 코로나19 유행은 막을 수 없었다.

크게 논란이 일었던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는 어떨까? 당연히 입국금지를 했더라도 유행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다만 질병관



리본부 등 방역 일선의 부담은 줄여줄 수 있었을 것이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환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국내 방역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 중국인에 대한 관광비자 발급을 중단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정부가 대북 정책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져보면 높은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고려하더라도 관광객까지 받을 필요는 없었다. 또 중국에서 한국인 입국자를 강제 격리 조치했을 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면서, 일본이 중국과 한국에 대해 동시에 입국 금지를 시행했을 때는 즉각 일본에 대한 입국 금지령을 내렸던 것만 봐도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3장. 강력한 방역조치, 언제까지 지속해야 하나

사회적 거리두기나 지역봉쇄 같은 조치의 강도와 지속 기간은 경제와 보건으로 여력에 따라 결정된다. 방역조치를 풀었을 때 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의료 여력을 고려하면서, 경제가 완전히 붕괴하지 않는 선까지 지역사회 방역조치를 지속할 수 있다.

확산방지 전략은 코로나19의 미생물학적 특성 때문에 언제까지나 지속하긴 어렵다. 지역사회 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밀접 접촉자 추적과 활동제한을 완벽하게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확산방지 전략을 쓰는 동안, 의료 물자를 확충하고 질병 특성이나 치료제 연구에 힘써야 한다. 또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의료기관 지침도 모두 만들어놔야 한다.

이후 지역사회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대유행 시기가 오면, 확산지연과 보호 전략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 전략에서는 밀접접촉자 추적에 쏟는 노력을 최소화한다. 대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다. 휴교령을 내리고, 재택근무를 실시하며 모임이나 집회를 자제한다. 국가에 따라서 감염이 심각한 지역의 교통을 차단하고 이동제한령을 내리는 지역봉쇄를 시행할 수도 있다.

동시에 취약집단 보호에 집중하게 되는데, 코로나19의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과 고령자가 그 대상이다. 병에 걸렸을 때 사망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서, 예방, 진단, 치료에 우선순위를 주게 된다. 취약집단 보호에는 일차의료, 즉 주치의의 역량이 중요하다. 주치의가 평소에 지역 내 취약집단을 식별하고 관리하고 있어서, 코로나19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나 지역봉쇄 같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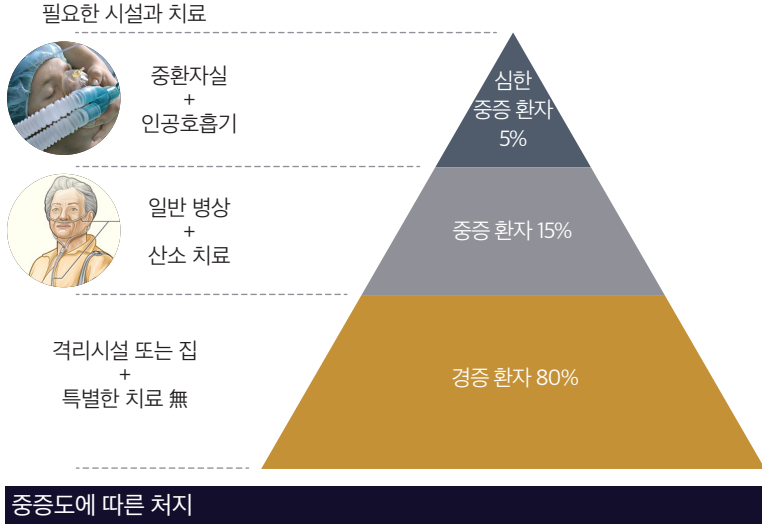
로 한 지역사회 방역조치는 많은 고통을 수반한다. 따라서 실시 강도나 유지 기간은 중요한 쟁점이다. 강도와 기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두 가지다. 경제적 체력과 보건의료 역량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는 각국 간 격차가 크다.

경제적 체력에서 중요한 요소는 경제성장률과 누적 국가부채다. 경제학자들은 이탈리아 수준의 지역봉쇄를 한 달 실시하는 경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5%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엔 세 가지 비용이 포함된다. 첫째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산업 생산과 내수 소비 감소로 인한 경기침체 효과다. 둘째는 방역조치와 치료에 들어가는 의료 비용이다. 셋째는 경제적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소득이나 자금 지원 비용이다.

그러나 국가의 지원도 한계가 있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국가들은 강력한 방역조치가 장기간 이어지면, 대규모 파산과 실업이 불가피하다. 또 지원 비용은 국가부채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따라서 경제성장률과 누적 국가부채 규모에 따라서 방역조치를 견딜 수 있는 기간이 상이하다.

만약 지역사회 방역조치가 중단되면 확진자와 함께 의료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건의료 역력에 따라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지표는 병상 수, 중환자실 시설, 이를 운영할 의료 인력이다.

코로나19 환자의 80%는 특별한 치료 없이도 나올 수 있다. 15%는 입원해서 산소치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 5%는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하며, 스스로 호흡할 수 없는 환자는 인공호흡기가 필요할 수도 있다. 5% 중 절반이 사망한다. 따라서 80%의 경증 환자



는 병실이 아닌 지정시설에 격리하고, 나머지 20%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실을 남겨놔야 한다. 산소치료 시설과 인공호흡기를 최대한 확보해서 환자 폭발에 대비해야 한다.

결국 유행이 발생한 국가는 방역조치를 풀었을 때 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의료 여력을 고려하면서, 경제가 완전히 붕괴하지 않는 선까지 지역사회 방역조치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경우에는 경제성장률은 높지 않지만, 국가부채는 보통 수준이다. 병상이나 중환자실 시설은 평균 이상으로 많지만, 의료 인력은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다른 국가에 비해 여건이 나쁘지는 않다. 반면 이탈리아는 경제성장률은 낮고, 국가부채는 많다. 병상도 한국의 1/4 수준이며 의사 인력은 EU 평균, 간호 인력은 EU 최하위다. 다른 국가의 도움이 없다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2부

정치

4장. 반세계화 포퓰리즘과 감시통제 사회의 도래

코로나19 사태 이후 인종주의·보호무역주의 등의 반세계화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들은 방역을 명분으로 권위주의적 시민 통제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반세계화, 반민주적 정책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가 크게 변하고 있다. 경제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렇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각국 정부의 반세계화 정책과 시민통제 정책을 시민들이 별다른 저항 없이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위기로 반세계화 추세는 더욱 더 빨라졌다. 세계패권을 두고 다투던 미국과 중국은 “중국 바이러스” “미국이 중국에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라는 말을 주고받으며 외교적 갈등을 이전보다 더 과격하게 이어가고 있다. G2로 불리는 양국은 이름에 걸맞지 않게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세계의 각자도생 흐름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민자·외국인이 “일자리를 뺏어가고 범죄를 저지른다.”라는 인종주의적 혐오가 외국인인 바이러스 전파의 주범이라는 인식으로 확장됐다. 국제적 생산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각국은 약품·마스크·식량 등의 수출 중단 조치를 취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세계화됐지만, 인류는 오히려 국경의 장벽을 높이 쌓고 있는 실정이다. 4월 1일 현재 181개국에 외국인의 입국과 입국 후를 통제하고 있다. 이 중 124개국은 국경봉쇄,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등 국제 인적교류를 사실상 전면 중단한 상태다.

동남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등 의료 역량이 취약한 지



3월 28일, 파리 루브르 박물관 앞을 지키는 군 정찰대.

역에서는 반세계화 정책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국제 공조와 인도주의적 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지만, 선진국에서 의료물품을 수입하지도 못하고, 경제지원도 받지 못하니 말이다. 최근에는 주변부 국가에서도 곡물 수출을 제한해 국제 식품 가격이 급등할 조짐을 보인다. 국가 간 장벽이 없는 유럽마저도 대부분 국가가 국경 통제에 나서면서 ‘하나의 유럽’이 무력화됐다. 예로 이탈리아의 긴급 지원 호소에 다른 26개 유럽연합 국가 중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굳게 닫힌 국경은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풀리더라도, 위기에는 ‘각자도생’밖에 없다는 인식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권한이 커지면서, 평시라면 불가능했을 각종 감시·통제 조치들이 강화되고 있기도 하다. 방역의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재 각국의 감시 체제는 이미 너



인도 바레일리 시에서 방역관들이 타 지역에서 온 노동자들에게 소독액을 분사하여 논란이 되었다.

무나 거대해졌다. 우리나라는 CCTV·신용카드 사용내역·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고 있는데, 지자체별 동선 공개가 경쟁적으로 이뤄지면서 확진자 신상과 동선을 두고 온갖 비난과 혐오발언이 확산되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는 얼굴 인식 감시 카메라 17만 8000개가 설치돼 자가 격리 위반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방역을 명분으로 한 시민 통제는 민주적 제도가 취약한 나라에서는 아예 폭력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중이다.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구호품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압한 뒤, 봉쇄 기간에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국민을 사살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인도에서는 식량을 구하러 거리로 나온 격리자나 홈리스를 경찰과 자경단이 폭행하는 일들이 발생하는가 하면, 지역 정부가 확진자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해 지역사회 내에서 집단폭행이

늘고 있기도 하다.

정권에 비상 권력을 부여하는 법을 통과시키거나,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나라들도 늘고 있다. 헝가리에서는 ‘동유럽의 트럼프’로 불리는 오르반 총리가 국가비상사태의 무기한 연장 권한과 행정명령으로 기존 법률을 무력화할 수 있는 무소불위 권한을 갖게 됐다. 러시아, 중국, 이집트, 헝가리, 요르단 등에서 가짜 뉴스 처벌을 명분으로 언론을 탄압하는 사례도 여럿 나오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비상사태를 이용해 의회를 봉쇄했고, 임시 국내감시권을 정보기관에 부여했다.

5장. 포퓰리즘 정치는 어떻게 코로나 위기를 키우는가

코로나 사태조차 진영론으로 각색되었다. 정부의 소통은 여전히 사태를 호도한다. 정치위기와 포퓰리즘은 재난 대응의 혼란을 가져와 피해를 더욱 키운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사태는 그 어떤 나라보다 정치적이다. 정부와 여당은 방역을 소위 ‘국뽕’으로 이용하고 있고, 야당은 코로나로 시작해 문재인으로 끝나는 정치 선동을 반복하고 있다. 정치권은 국가적 재난 극복보다 정치적 이해득실에 더 몰두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심지어 재난 극복의 책임자라 할 집권세력은 아무리 총선이 코앞에 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보다 위성정당 세팅에 더 집중하는 것처럼 보인다. 트럼프 대 반트럼프 진영으로 양분되어 있는 미국이 의회를 중심으로 초당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비교해 봐도 한국의 정치 상황은 정상과 거리가 한참 멀다.

따져보면, 전염병으로 인한 재난을 정치적 소재로 적극적 활용한 전례는 바로 민주당이었다. 메르스 사태 당시 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은 신종감염병 대응의 실패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대통령 사과 같은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었다. 메르스를 “불통과 무능이 키운 질병”이라 말한 것은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을 정도다. 포퓰리즘은 위기의 원인을 찾고 해법을 모색하기보다, 정치적 경쟁자를 비난하는 것에 몰두하면서 오히려 위기를 활용한다. 위기가 커질수록 경쟁자를 비난하기 좋다. 당시 민주당의 전염병 대처는 정확히 포퓰리즘의 정형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현재 야당인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방법도 공수만 바뀌었을 뿐 당시와 다르지 않다. 말하자면, 미래통합당은 5년 전 문재인을 그대로 따라했던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월 13일에 코로나19가 “머지 않아 종식될 것”이라 발언했다. 그러나 2월 17일 대구지역 첫 확진자이자 신천지 신도인 31번 환자가 확진을 받은 후, 확진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31번 환자는 문재인이 “종식될 것”이라 낙관하던 2월 9일, 16일에 신천지 예배에 참여해 슈퍼전파자가 됐다. 방역망이 이렇게 뚫린 것이다. 이런 와중에도 대통령은 사태의 엄중함을 알리기 보단 ‘쇼통’을 반복했다. 2월 20일 대통령 부부는 봉준호 감독과 짜파구리 오찬을 하며 ‘과안대소’를 해 빈축을 샀다. 2월 21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창문열고 모기잡나’는 비판에 “겨울이라 모기 없다”고 반박해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그는 중국 봉쇄가 한창 정치

적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25일 “대구·경북 봉쇄조치”라는 용어를 써 공분을 사기도 했다. 마스크 가격 급등과 품질 사태는 정부의 무능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2월 초부터 마스크 사용을 권장했지만, 마스크 수급과 관련한 대책은 3월 9일이 되어서야 발표됐다.

물론 신종감염병이라는 특성 탓에 정부 대책에 여러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한다. 하지만 문제는 바이러스 대책이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한 집권세력의 포퓰리즘 정치 행태다. 사실 과거 민주당의 정치공세를 기억한다면, 미래통합당이 총선 이후 대통령 사과를 요구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방역 대책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박원순 등은 신천지, 보수집회에 책임을 떠넘기며 비난의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심지어 공지영 같은 극단적인 친문세력은 대구가 선거를 잘못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환자 비난하기’도 서슴지 않았다. 중국인 입국 금지도 그렇다. 중국 입국 금지가 확산을 지연시켰을지는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정부가 중국과 일본에 똑같은 태도를 취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 즉 감염 관리라는 과학적 근거보다 정치적 목적이 앞섰다는 것이다. 심지어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갈등을 조정하기보다, 위기를 활용해 지지자를 규합하는 행동들도 저지르고 있다. 미증유의 현 위기를 헤쳐나갈 대안을 머리를 맞대고 모색하기보다는 극단적 진영논리를 집권세력이 오히려 강화하는 형국이다.

이제 코로나 사태는 안심해도 될까? 총선에 악재가 될까 두려워했던 민주당만 안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문제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좋아진 것은, 한국의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더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전 세계는 지금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보건 위기를 맞고 있다. ‘착시효과’에 속아서는 안 된다. 코로나19는 다시 확산할 수 있다. 설령 확산이 억제되더라도 경제위기라는 쓰나미는 반드시 밀려올 것이다.

3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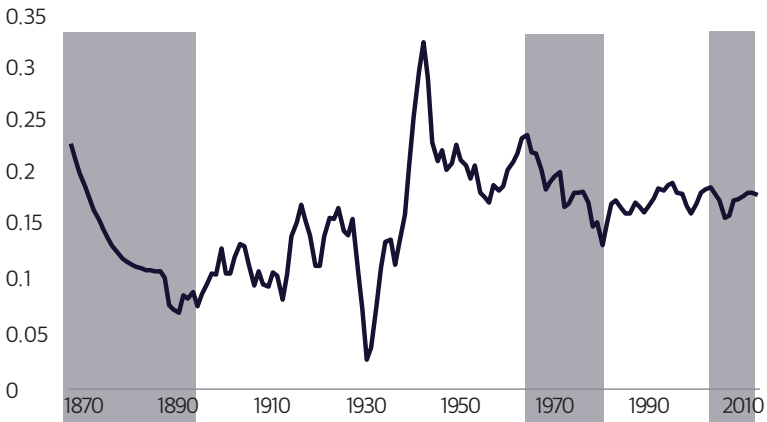
경제

6장. 코로나19가 악화시킨 세계경제의 기저질환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세계경제는 이미 경제침체가 예상됐었다. V자 회복보다는 더블딕과 L자 장기침체를 예상된다.

올해 세계경제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침체가 예상됐었다. 세계경제가 앓고 있었던 기저질환 탓이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침체를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증폭시켰다. 세계의 경제적 기저질환은 크게 보면 다음 두 가지였다.

첫째 이윤율 하락으로 나타나는 생산성 둔화였다. 여러 경제학자가 지적했듯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의 생산성(노동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 향상은 2010년대 크게 둔화된 상태였다. 경제성장의 펀더멘탈이 취약했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이유는 적자재정과 수량완화(양적완화)로 인한 착시 효과였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쏟아부은 돈으로 미국에서는 소수 ICT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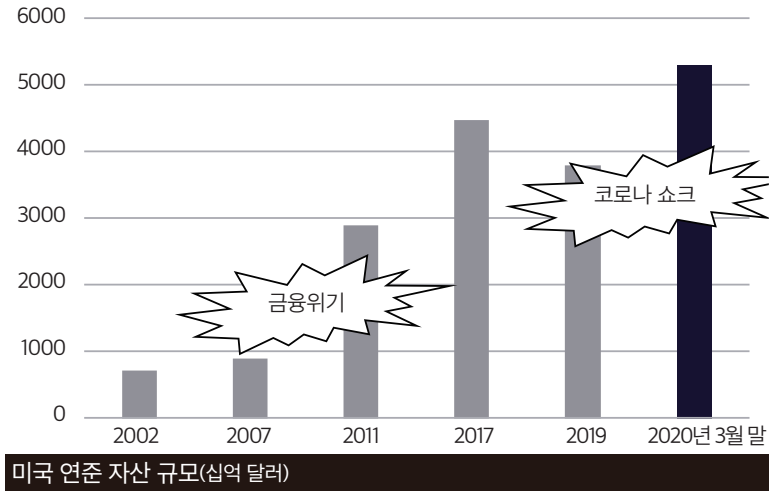


미국의 이윤율 추이(제라드 뒤펜, 도미니크 레비)

이 주식시장 붐을 일으켰고, 중국에서는 국영기업의 엄청난 손실을 국영은행의 대출과 무역흑자로 덮었으며, 일본에서는 200%가 넘는 국가채무와 4배 넘게 증가한 중앙은행 자산으로 민간 소비와 저축을 촉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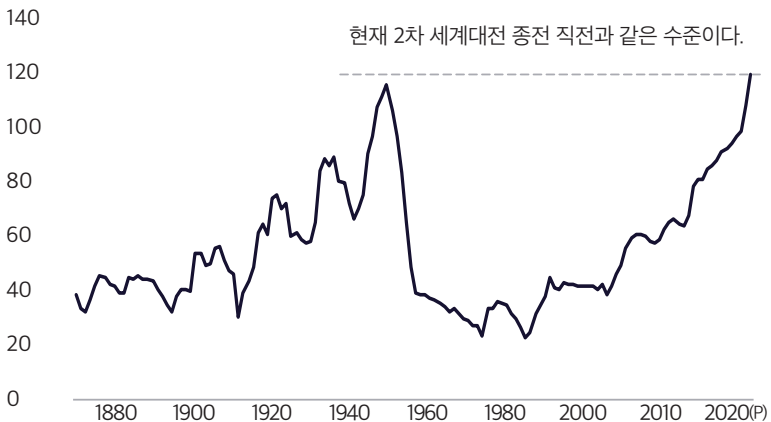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덮치자 이런 성장의 신기루가 바로 건넜다. 미국에서는 주식시장이 바로 폭락했고, 중국의 거품 성장물이 사라졌으며, 일본의 민간소비가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갔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부 재정 여력이 취약해지자, 정부에 의존하던 경제주체들의 불안이 폭발한 것이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10년 넘게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은 중앙은행이 공급한 화폐와 정부 재정적자가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다섯 배 가까이 증가한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자산은 2019년까지도 그다지 줄지



않았고, G20 선진국의 국가채무 비중도 전혀 줄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다시 무제한 양적 완화와 천문학적 재정적자가 이뤄지고 있다. 심지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2020년 선진국 재정적자는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과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무역전쟁으로 표현되는 반세계화 포퓰리즘이었다. 2007~2009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자국 위기의 원인을 세계화나 외국인에게서 찾는 정치인들이 급증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대표적이었다. 이들이 집권과 동시에 추진한 정책은 기존의 국제적 협력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했고,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을 무력화했다. 영국은 유럽연합을 탈퇴했다. 그런데 이런 반세계화 흐름은 자본의 세계화와 충돌한다. 2천 년대 성



주요 20개국 GDP 대비 정부 채무 비율(%)

장의 주역이었던 금융세계화는 시장만이 아니라 국가 간에도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 금융의 세계화와 정치의 반세계화는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코로나 사태는 반세계화 포퓰리즘 정치가 얼마나 세계경제에 위협이 되는지를 다시금 확인시켜줬다.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채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발 입국 금지를 선포하자, 미국과 유럽 경제가 동시에 충격을 받았다. 유럽에서의 아시아인 혐오는 중국 침체가 유럽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었다. 경제 위기는 반세계화 정책 탓에 더욱 심각해졌다.

한편, 이런 가운데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방역이 종료 되면 경제가 급속도로 나아지리라 예측하기도 한다. 이른바 V자 회복론이다. “돈맥경화”가 풀리면 돈의 순환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이야기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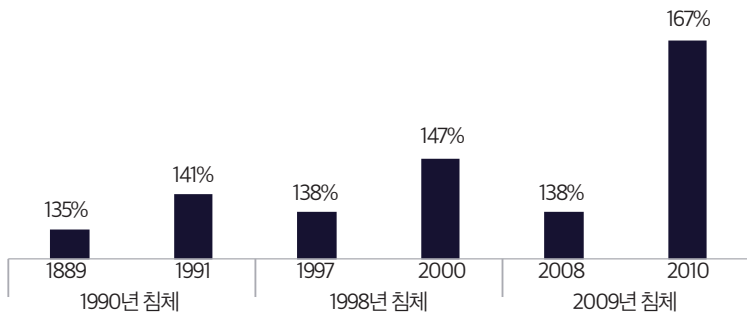
하지만 이는 세계경제가 이전부터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점을 무시한 주장일 뿐이다. 건강한 사람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돼도 금방 회복이 되지만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세계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V자 회복이 아니라, 침체는 심하게, 회복은 약하고 짧게, 그리고 다시 침체가 반복되는 더블딥 L자 장기침체가 예상된다.

7장. 바이러스는 평등해도, 사회는 평등하지 않다

코로나 19 사태는 특히 고용과 임금이 취약한 취업자들에게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노동운동은 이들을 지원하고 연대하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제 위기가 닥치면 노동자 간 격차는 이전보다 증가한다. 취약한 노동자일수록 오히려 제도와 노조로부터 덜 보호되기 때문이다. 아래 그래프는 이런 양상을 잘 보여준다. 이전 같은 노동시장 조건이 이어진다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노동자 간 격차는 이전보다 또 커지게 될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차이만이 아니라 대기업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기업별, 산업별로 경제침체 여파를 받는 정도에 따라 고용안정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소득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19 사태에 가장 피해를 보는 부분은 역시 자영업이다. 국민계정으로 계산해 보면 자영업자 570만 명의 1인당 소득은 연 1200만 원(2018년 기준)에 불과하다. 월로 환산하면 100만 원이다. 여기에 무급가족종사자까지 합하면 비임금근로자 1인당 소득은 월 80만 원까지 내려간다. 노동자 임금의 1/3도 되지



10~29인 대비 500인 이상 임금

않는 액수다. 평균소득이 이렇게 작은 이유는 고령 자영업자의 극단적으로 낮은 소득 때문이다. 노상에서 채소를 파는 할머니, 한산한 중소도시 재래시장 가게, 거주지와 붙어있는 슈퍼마켓 등을 떠올려보면 짐작이 갈 것이다.



263만 명

1200만 원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 평균 연소득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2018년)

(도소매, 음식숙박, 미용, 여객,
오락, 학원)

저소득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광역도시의 경우 자영업 소득은 25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 그런데 평균이 이렇다는 것이 다수 자영업자가 이 정도 소득을 번다는 것은 아니다. 자영업자 사이 소득 격차는 임금보다도 더 극단적으로 벌어져 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은 10명 중 6명이 월 소득이 100만 원이 안 된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도 월 소득이 1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가 10명 중 4명이다.

산업으로 보면 노동 빈곤층이 밀집해 있는 곳은 도소매, 음식·숙박, 사업지원(시설관리), 사회서비스 업종이다. 도소매업에는 370만 명이 종사한다. 이 중 60만 명이 비정규직, 90만 명이 영세자영업자다. 음식·숙박에는 230만 명의 종사자 중 140만 명이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이다. 청소, 경비와 같은 사업지원에는 130만 명이 종사하는데, 이 중 100만 명이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다. 사회복지서비스에는 80만 명이 종사한다. 대부분 비정규직이며, 임금 역시 대부분이 최저임금 미만이다.

8장. 재정 증독과 현금 숭배에 빠진 세계는 지속 가능한가

세계 각국이 양적완화로 불리는 통화확장과 국가부채를 늘리는 재정확장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화폐도 재정도 화수분이 아니다. 지불의 순간이 올 때 문제가 커진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무제한 양적완화를 선언했다. 국채, 모기지증권 같은 정부가 상황을 보증하는 채권만이 아니라 회사채와 같이 민간 기업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채권들도 매입하기로 했다. 그리고 유럽은행, 일본은행, 심지어 한국은행까지 비슷한 행보에 나섰다.

각국 중앙은행이 이렇게 현금을 뿌려대는 이유는 하나다. 모두가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써 현금을 원하기 때문이다.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상대가 발행한 채권을 믿지 못한다. 코로나19 경제침체로 상대방이 파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현금은 나라가 파산하기 전까지 그럭저럭 가치가 유지되지만, 민간 채권은 상대가 파산하면 휴짓 조각이 될 수 있다.

중앙은행은 현금의 가치를 자신이 보유한 자산을 통해 보장한다.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이다. 옆에서 보듯 중앙은행이 현금을 부채로 발행하면서, 그 현금만큼 자산을 보유한다. 현금은 자산의 가치에 대응한다.

미국 연준을 보면 유통 중인 달러 현금과 은행이 보유한 잠재적 현금(지급준비금)의 합이 국채, 모기지증권 가격 합과 같다. 현금이 이 두 자산의 가치로 지지된다는 것이다. 국채는 시민의 현재와

자산		부채		자산		부채	
국채	3조	현금	1.8조	국채	17조	현금	132조
모기지증권	1.4조	지급준비금	2.3조	국외자산	450조	지급준비금	58조
기타	0.9조	기타	1.1조	기타	6조	기타	283조

미국 연준 대차대조표(달러, 2020년 3월) **한국은행 대차대조표(원, 2020년 1월)**

미래 세금으로 상환되는 정부의 빚 증서다. 모기지증권은 주택 가격이 담보이며, 주택 가격은 현재와 미래의 임대료에 의해 결정된다. 즉 달러 현금은 정부가 시민의 세금을 얼마나 걷을 수 있는지, 주택 가격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지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가 걷는 세금이나 주택 가격은 단지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기대까지 포함한다는 점이다. 국채와 모기지증권 모두 상환 기간이 길게는 30년이 넘는다. 짧지 않은 미래에 대한 기대, 즉 정부 지불능력(세금정수)의 지속성과 미래의 주택가격 예상이 두 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또 현금의 가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 예상은 주관적이다. 심리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연준이 이런 기대에 영향을 받는 자산을 많이 보유할수록 달러 가치는 더 불안정해진다. 그래서 연준이 국채와 모기지증권보다 심리적 영향을 더 많이 받는 회사채까지 보유한다는 것은 화폐 가치 역시 그만큼 더 불안정해진다는 의미가 된다.

한국은행의 경우 이런 불안정성이 더 심하다. 원화 가치가 달러에 의해 지지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자산의 대부분을 국외자산, 특히 달러로 표시된 채권으로 채워놓았다. 부채는 현금과 통화안정증권으로 주로 구성돼 있다. 통화안정증권은 금융기관이 보유

한 현금을 중앙은행에 잡아두는 역할을 한다. 이 둘의 가치는 한국은행이 보유한 국외자산에 의해 보장된다. 한국은행이 국채와 같은 국내 자산이 아니라 미국 채권으로 자산을 채우는 이유는 국내 자산이 국내외에서 안정적이라고 평가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정적 원화를 위해서는 미국 달러가 필요하다.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은행은 자산에 은행과 증권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단기 채권(RP)을 채워 넣기로 했다. 증권회사 파산 시 문제가 발생하는 자산들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물론 담보가 공사채(한국전력, 철도공사 등등)라 어느 정도 안정성은 확보되어 있다. 그렇지만 국채보다 불안정하다. 국채도 많이 보유하지 않았던 한국은행으로서는 이전에는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불안정성에 노출되는 꼴이다.

요컨대, 중앙은행에 불안정한 자산이 증가할수록 화폐의 불안정성도 커진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화폐위기 가능성이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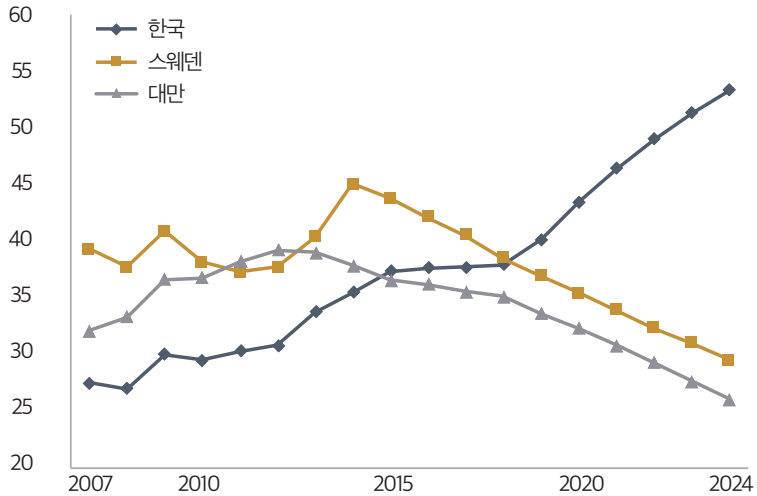
한편,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 각국의 정부 채무도 급속도로 증가 중이다. 정부 빚은 핵심적으로 국채 발행으로 조달된다.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는 관리통화제도에서는 원리상 정부 채무가 무한히 증가할 수 있다.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해 이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양적완화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런 양적완화가 무한히 지속가능한 것은 아니다. 정부의 지불능력, 즉 국채 상환 능력이 낮아질수록 화폐 가치도 하락하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가 부채를 계속 늘리고, 또 중앙은행이 화폐

를 계속 늘려 이 국채를 인수하게 되면, 정부의 지불능력이 불안정해지는 만큼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담합으로 국채를 상환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국채를 가지고 있는 민간 금융기관이나, 가치가 하락한 화폐로 소득을 얻는 시민 입장에서는 정부에 사기를 당하는 꼴이 된다. 민간이 정부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자국의 화폐를 버리고, 외국 화폐를 보유해야 한다. 민간 자본이 국외로 도망을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국부유출로 나라 경제가 망하고 만다.

이렇게 정부 채무의 상한선은 국내 자본이 해외로 도피하지 않는 경계점이다. 정부의 실질적 지불능력이 자본의 해외도피 잣대가 된다. 정부의 실질적 지불능력은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보다 국민 경제의 성장 속도가 더 빨라야 보장된다. 세계경제의 조건이나 국내의 금리 변화도 영향을 미친다. 남미의 경우 정부 채무가 급증하는데 경제성장률은 하락하고, 동시에 세계경제 금리가 상승하면서 국제적 자금이동도 빨라졌을 때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가부도가 났었다. 한국의 1997년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은 어떤 상황일까? 우선 코로나19 이후 성장 둔화가 더 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이미 확정된 재정적자만 따져도 채무 비율이 급증한다. 코로나19 재정정책으로 이는 더 빠르게 상승할 것이다. 또한 세계적 혼란으로 국제 자금들은 달러로 도피 중이다. 모든 조건이 정부가 조금만 불안해도 민간 자본이 도망가기 좋은 상황이다. 옆에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는 대만보다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 심지어 유로화와 연관(코로나는 유럽 연합과 특수 관계)되어 있는 스웨덴보다도 빠르다.



GDP 대비 정부 채무(%), 자료IMF, 2019년 이후는 2019년 말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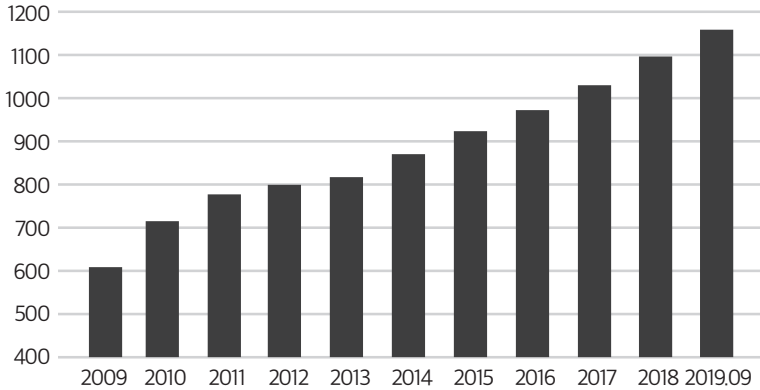
참고로, 국가채무를 비교할 때 OECD평균이나, 미국, 일본, 유로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은 오류다. 세계 각국이 보유하는 기축 통화(달러, 엔, 유로, 파운드)와 한국 원화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OECD의 비기축통화국들은 대체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0~50% 사이에 있다.

9장. 포퓰리즘적 현금 지급 정책을 경계한다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재난 대책이라며 무분별한 현금 지급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현금 살포는 실효성도 떨어지는 데다, 국가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재난소득 등의 이름으로 주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현금이 아니라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지자체들도 있으나, 소비자금이 아예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그만큼 현금 지출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효과는 비슷하다. 경기도의 경우 약 1조4천억 원 규모로 모든 주민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9조 원 규모로 전국의 70% 가구에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과 민주노총 등은 아예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 중이다. 하지만 이런 현금 지급 정책은 효과도 별로고, 국민경제의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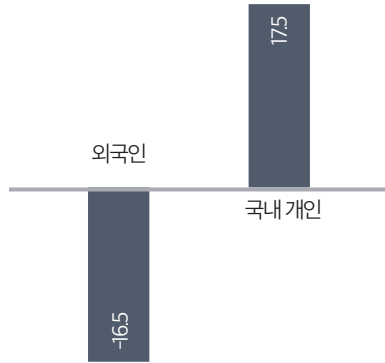
우선, 현금 살포는 효과가 크지 않다. 코로나19 방역은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이다. 방역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업종들이 오랫동안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자영업자만 해도 2백만 명이 넘게 생계위협에 빠진다. 산업 자체가 붕괴 직전까지 내몰린 항공, 관광 등의 산업에도 수백만의 노동자가 있다. 이들에게는 한 번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의 체계적인 지원과 재활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난소득’부류의 현금 지원 정책은 한 번에 수십조 원을 써버린다. 기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까다롭고, 선별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고 있다. 100만 원 한번 받아 해결될 일



일반 은행 원화 예수금(조 원)

이 아닌데도 말이다.

현재 시중부동자금으로 불리는 현금성 자산의 증가 추이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다. 2019년 말 시중부동자금은 1천 조원으로 증가한 상태다. 많은 사람들이 소비나 실물 투자 대신 현금성 자산을 축적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금으로 50조 원을 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정말 생계가 급한 사람은 소비에 쓰겠지만, 나머지는 예금이나 최근 청년들이 빚을 내며 하고 있는 주식에 투기될 것이다. 지난 두 달간 상황을 보면 국내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18조 원을 샀고, 외국인이 17조 원을 팔았다. 국내 현금이 이렇게 외국인이 판 주식을 구매하는 데 사용된다. 참고로 이런 사정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은행 초과지급준비금은 금융위기 이전 2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양적완화 이후 2.7조 달러로 급증했다가, 2019년 말 1.3조 달러로 감소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 다시 1.6조 달러로 증가했다. 시중에 쓸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두



주식 순매수액(조 원, 2020년 2월~3월)

가 안전 자산을 찾아 현금에 매달리고 있다는 뜻이다.

무분별하게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현금을 살포할 경우 국가채무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2020년에 1% 미만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기존보다 50조 원의 국가채무가 증가할 시, 채무비율이 41~43%가 된다. 만약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지면, 44~45%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 이전의 재정계획대로 가면 2023년에는 50%를 넘긴다.

혹자는 이런 사정을 무시하고 한국의 국가채무가 매우 낮다며, 지금은 마음껏 적자를 늘려도 된다고 주장한다. 선진국 중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와 한국을 비교해 보자. 국제통화기금(IMF)의 2019년 추정치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은 대만 34%, 스웨덴 37%, 스위스 39%, 노르웨이 40%, 오스트리아 42%, 이스라엘 62%, 한국 40%이다. 이 중 5년 사이 이 비율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나라는 노르웨이와 한국이었고, 앞으로 5년 내 이 비율이 가장 높아질 나라는 이스라엘과 한국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 속

도는 더 빨라질 것이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안심해도 되는 상황이 아니다. 수준도 속도도 문제가 된다.

정부 재정정책은 한국의 경제적 제약을 고려하면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취약계층과 생산자원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난소득 식의 대안은 오히려 할 수 있는 대책마저 시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10장.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 전망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세계경제 침체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수출 감소, 금융시장의 자본유출, 자영업 붕괴 등으로 큰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이전부터 진행 중이었던 저성장, 고령화 속도도 더 빨라질 것이다.

한국경제는 세계경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세계경제가 기침을 하면, 한국경제는 앓아눕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수출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금융시장도 규제 없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기 때문이다.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은 낙관적인 견해조차 1% 남짓을 예상한다. 최근 한국경제성장률이 세계경제보다 1% 포인트 이상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0년 한국경제는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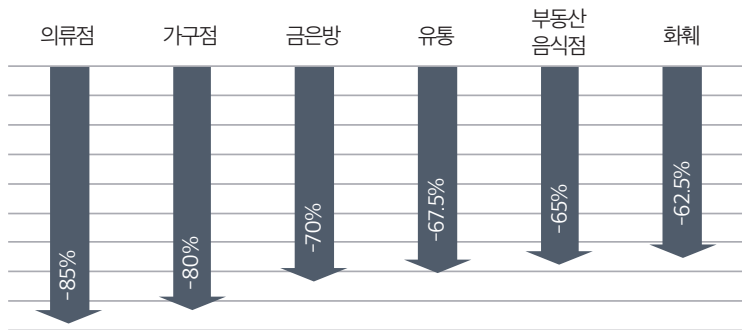
수출을 주도하는 대기업들은 이미 2019년부터 순이익이 급감한 상태다. 상장기업의 2019년 순이익은 전년도에 비해 반 토막이 났다. 부채비율 역시 7%포인트 급상승했다. 2020년 세계경제 사정을 감안하면 수출대기업조차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수출을 이끄는 삼성전자는 2020년에도 어려움을 겪겠지만 워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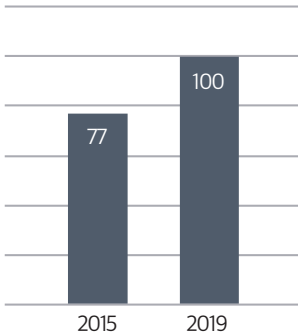
구분	2018년 1~12월	2019년 1~12월	증감	증감률
매출액(억 원)	19,969,723	20,064,576	94,852	0.47
영업이익(억 원)	1,620,490	1,020,285	-600,205	-37.04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567,405	783,433	-783,972	-50.02
순이익(억 원)	1,111,433	524,420	-587,013	-52.82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1,025,587	483,528	-542,059	-52.85
매출액영업이익률(%)	8.11	5.09	-3.03	
매출액순이익률(%)	5.57	2.61	-2.95	

전년 동기대비 2019년 누적실적(1~12월)

현금 유동성이 좋고, 물리적 거리두기로 온라인 산업이 호황을 누리면서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몇 년간의 어려움 끝에 작년 반등에 성공한 현대차는 다시 매출 감소와 이익 감소에 직면할 것이다. 중국, 미국, 유럽 등 세계의 핵심 자동차시장이 모두 곤두박질치고 있어서다. 세계경제침체에 무역까지 감소하는 상황이라 조선업은 2008년과 비슷한 선박수주 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이미 수주한 선박이 꽤 있어, 시차를 두고 위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석유화학, 철강, 일반기계처럼 제조업 전반의 경기 변화에 영향을 받는 산업들도 심각한 침체가 예상된다. 1분기 매출은 20% 내외의 감소가 예상되는데, 2분기는 이보다 더 감소할 것이다. 항공이나 관광처럼 코로나19에 직접 영향을 받은 산업은 정부 지원 없이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 대규모 구조조정은 외국인투자 기업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이전부터 구조조정과 철수 위협이 이야기되던 자동차 외투기업들은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 본사가 경영위기에 처하면 해외계열사들에 위기를 전가하는 것이 초국적기업의 생리다.



매출 급감한 골목상권 업종(전년대비 증감률, 지난 2~3월 기준, 추정치, 한국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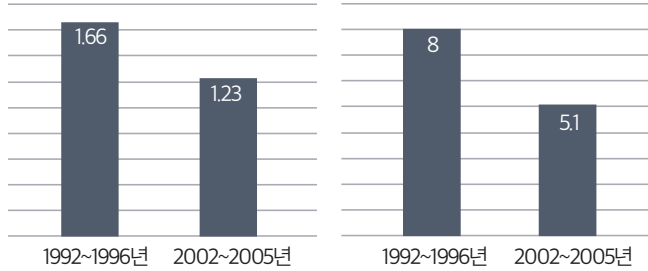


ELS 발행규모(조 원)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내수 침체는 자영업 부문에 특히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한국의 자영업은 이미 잘 알려져 있듯 오랫동안 노동시장의 배수통 역할을 해왔다. 사업 경쟁력에 있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 사업을 하는 부문이란 의미다. 자영업

부문은 예전부터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한 부문이었다. 또한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노동자의 진입으로 경쟁이 역으로 격화됐던 부문이기도 했다. 영세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1분기에 매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 반 토막이 났다. 소득 자체가 낮았고 부채도 컸기 때문에 대규모 신용불량 사태도 예상된다. 참고로 700만 자영업 부문 취업자 중 20%가 실업자가 되면 실업률(2월 말 실업자 110만 명)은 두 배로 상승한다.

금융혼란 역시 한국 경제위기의 뇌관이다. 특히 수년간 직장인 투자 상품으로 선풍적 인기를 얻은 ELS(추가연계증권)가 위기에 빠졌다. 100조 원에 이를 정도로 커진 ELS는 오는 2월부터 전 세계 주가가 폭락하면서 부실화될 위험성이 있다. 한국은행은 이런 상황 탓에 증권사에 무제한으로 자금을 공급하기로 긴급하게 결정하기도 했다. 올해가 만기인 국내 회사채 51조 원도 지뢰밭이다. 기업들이 순익을 내서 회사채를 상환하든지, 아니면 회사채를 재발행해 롤오버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순익은 급감하고 회사채 시장은 얼어



출산율(왼쪽)과 경제성장률(오른쪽)

붙었다. 2019년 말 1,600조 원에 이른 가계부채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경제의 약한 고리로 지적됐던 바였다. 가계부채의 절반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어떻게 막아본다고 하더라도, 생계나 사업을 위해 받은 나머지 대출은 형태도 다양하고, 담보도 복잡해 정부 당국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위기로 인해 한국의 저성장·고령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이미 한국사회는 십 수년간 성장률 둔화와 출산율 하락을 겪어왔다. 특히 출산율 하락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독보적으로 빨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충격은 이런 경향을 더욱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예로 외환위기 경제충격이 양자에 미친 영향을 참조할 수 있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한국은 인구학적 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충격이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다.

이전보다 더 빠르게 경제성장과 인구가 감소하면, 우리 사회는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확대되고, 성장을 전제로 만들어진 여러 제도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4부

사회운동

11장. 사회운동의 긴급한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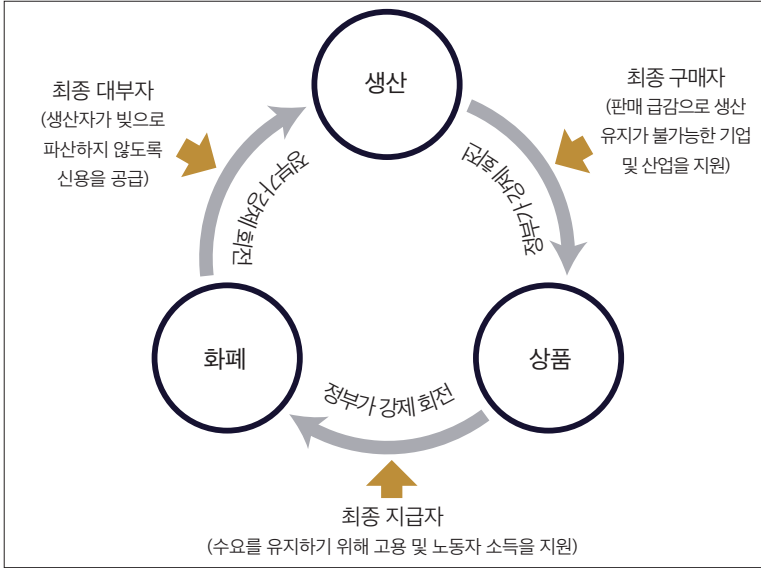
취약계층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함께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고용유지 및 빈곤층 지원 대책, 보건으로 부분의 과감한 인프라 투자, 연대임금-연대고용 정책, 파산 기업 자주관리 등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처방향은 생존위기에 처한 노동자를 시급하게 지원하되, 장기적 경제침체를 고려하여 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집중하는 것이어야 한다. 물론 앞에서 봤듯 현 사태는 자본주의 체제의 결함과 공백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만큼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자본주의를 변혁하는 과정이 현 위기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정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국가 채무를 급증시키는 재정정책이나, 화폐 가치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통화 정책은 한국 경제를 심하게 무너뜨린다. 사회운동의 요구로 발생하는 극단적 혼란은 자본주의에 대한 긍정적 방향의 변혁이 아니라 오히려 파시즘 같은 부정적 방향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 제약을 고려한 재정·통화 대책과 고용 및 실업 대책

물리적 거리두기 방역으로 돈의 순환이 멈췄다. 민간 경제가 작동하지 않으니, 정부가 나서 빈 부분을 채울 수밖에 없다. 최근 각국의 코로나19 정책은 정부를 전통적 의미의 최종 대출자로서만이 아니라, 최종 구매자와 최종 지급자로서도 이용한다.

정부의 최종 대부자로서 역할은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에 나서



자본주의 경제의 돈의 순환과 긴급한 상황에서의 정부 역할

기업들이 연쇄부도에 빠지지 않도록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다. 정부가 직접 대출자금을 조성하거나 보증을 서고,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등을 현금을 주고 구매한다. 정부의 “100조원+a” 정책이나, 한국은행의 무제한 RP매입 프로그램 등이 그러한 사례다. 정부의 최종 구매자로서 역할은 매출 급감으로 사업유지가 어려운 기업의 비용을 정부가 직접 내주거나, 부족한 매출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정부의 업종별 지원방안, 특별고용지원 업종 제도 등이 그러한 사례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관광, 공연, 외식, 항공, 해운 등에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의 최종 지급자로서 역할은 서민 생계와 상품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 고용, 실업, 복지 등에서 시민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실

업급여, 구직지원패키지 등을 확대하는 것이 그런 정책들이다.

시민의 생존권 측면에서 정부 대책 중 특히 주목할 부분은 최종 지급자로서 역할이다. 나머지 두 역할에는 그럭저럭 매뉴얼이 있는 반면, 사회안전망 제도가 부실한 서민 소득과 고용에 관해서는 대책이 매우 허술하다.

예로 고용 관련 대책의 핵심인 고용보험제도는 규모도 작거니와 포괄 대상도 협소하다. 휴업수당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60% 남짓만 지원하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소득이 되지 못한다. 더불어 고용보험은 정규직, 직접고용, 계속고용, 전속고용을 전제하고 있어, 여러 형태의 기간제, 간접고용,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은 사각지대로 남는다. 이런 이유로 현 고용보험은 전체 취업자의 절반도 포괄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취업성공패키지는 정책이 포괄해야 할 노동자에 비해 기금 규모가 지나치게 작을뿐더러, 부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현 법체계의 한계로 말미암아 일감이 줄어 사실상의 반실업 상태인 노동자에게 혜택이 미치지 못한다. 노동운동을 포함한 제 사회운동 조직들은 이번 기회에 고용보험 관련 제도들을 시급히 개선하고 확충하는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고용보험에 대한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책임을 높이고, 노동자 스스로도 좀 더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 2, 3차 위기를 대비한 대규모 보건의료 투자

코로나19는 이번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 확산이 될 것이

다. 또한 비슷한 바이러스가 앞으로도 창궐할 가능성도 높다. 보건 의료 부분의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더불어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점도 보건의료 투자가 시급히 필요한 이유다. 일자리 측면에서 대규모 보건의료 투자는 절실하다. 말하자면 보건의료 부분의 뉴딜이 필요하다.

보건의료 뉴딜은 대대적인 공공병원 확충과 의료시스템의 전면적 개혁을 동반해야 한다. 공공병원 확충은 무분별한 설립으로 위기에 빠진 중소병원을 국유화하는 것에서부터, 특히 전염병과 각종 질병 예방의 최전선에 있는 1차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의료행위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시급한데, 빅5로 불리는 대형민간병원의 영리적 의료행위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밖에 안 되는 공공병원을 가지고서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영리 중심의 민간병원이 의료시스템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 또한 이들 민간병원 중심의 의료시스템은 미국에서도 볼 수 있듯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전염병 대응에서도 매우 취약하다.

전염병에 대응하고 공공적 이해에 맞는 의료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확장이 모두 필요하다. 수직적 통합은 보건지소(또는 그와 비슷한 공공 일차의료기관)-지방의료원급 2차 병원-국립대병원급 3차병원이 독자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경증부터 중증까지 모든 환자에게 일관성 있는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 수평적 확장은 10%밖에 안 되는 공공병원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공단 같은 전국적 수준의 공공의료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도 고려할만 하다.

○ 해고제한 및 연대임금/연대고용

노동조합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용과 임금에 관한 대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대책은 결국 생산과 소비의 감소로 인한 고용과 소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다만, 자영업과 영세기업 부분을 이전과 같은 형태로 재건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장기적 고용 대책은 생산성이 높고 지불여력이 있는 경제부문에서 일자리를 크게 늘리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물론 대기업도 당분간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시기에 예전처럼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이 이뤄진다면 고용위기는 훨씬 더 처참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경제적이유로 인한 여러 방식의 해고(정리해고만이 아니라 희망퇴직 등의 해고 유도까지 포함)를 금지하는 정부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그런데 해고 금지의 이미 파산 직전까지 내몰린 영세기업에서는 그다지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위기에 취약한 부분의 일자리를 흡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민주노총과 산별노조들은 적극적으로 대정부, 대자본 교섭을 요구하며, 고용은 늘리고, 임금격차는 줄일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고용에 친화적이며,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임금체계와 임금수준, 개별 기업 단위가 아니라 사회적 수준에서 적용 가능한 임금 표준, 실노동시간 단축 등 고용 비중 확대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조직해야 한다. 코로나19 같은 급박한 정세 조건에서 노동자계급이 진정으로 단결하기 위해 필요

한 제도들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운동을 실질적으로 조직하기 위해 개별기업 노조의 교섭권을 산별노조와 총연맹에 실질적으로 이전할 수도 있어야 한다.

○ 협동조합, 자주관리 등 노동자 주도 생산조직 재건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는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악화될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의 근본적 결함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후의 대부자인 정부가 모든 기업을 살릴 수 없을 때, 전략적 순위가 떨어지는 기업부터 파산할 것이다. 이럴 경우 노동조합의 전통적 해결 방법은 정부에게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하거나, 다른 고용주를 찾는 것(인수합병)이었다. 하지만 이런 대응은 결국에는 구조조정을 전제하기 때문에 다수 노동자가 피해를 입는다. 심지어 경제침체가 심각해질수록 아예 이마저도 어려울 수 있다.

민주노총과 산별노조들은 구조조정 대응책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주관리 또는 협동조합에 관한 일반적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기업별 역량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산별노조가 다수 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다. 현장직 중심의 노조가 사무직, 연구직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원을 조직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존과는 전혀 다른 단체협약도 개발해야 할 것이다.

12장.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이제 자본주의 변혁에 대해 이야기하자

코로나19 사태는 자본주의의 근본적 결함을 보여줬다. 당장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현실적 대책과 함께 체제의 결함과 공백을 해결하는 노동자운동의 변혁적 도전이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 특성상 조기 종식이 어렵다.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데, 전파력은 너무 강하다. 심지어 무증상 감염이 많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방역을 해야 할 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이렇다보니 방역 대책도 무자비한 것들뿐이다.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물리적 거리두기를 계속하거나, 아니면 국민의 상당수가 감염되어 면역력을 얻는 것이다. 전자는 경제적 피해가 엄청나고, 후자는 인명 피해가 크다. 둘 다 선뜻 선택하기가 어렵다. 현재 세계 각국은 이 둘 사이 어딘가에서 방역을 시행하고 있다. 물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코로나19사태도 수습은 될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두고두고 세계를 괴롭힐 것으로 보인다.

첫째, 반세계화 인종주의의 창궐이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은 이제 서로를 믿을 수 없다. 각국은 2월부터 일방적으로 국경을 봉쇄해 극심한 혼란을 만들었다. 바이러스 확산을 다른 나라 책임으로 떠넘기는 정치인의 선동도 늘었다. 트럼프는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로 불렀고, 중국에서는 미국이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는 음모론이 널리 유포됐다. 코로나 이후 세계 각국은 자국 경제를 먼저 살리겠다고 이전보다 더욱 무역 장벽을 높게 세울 것이다. 보건 문제를 이유로 수시로 국경을 봉쇄할 수도 있다. 세계가 각자도생

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특히 이런 반세계화는 남미, 동남아, 아프리카 등 자력으로 경제와 보건을 챙기기 어려운 국가들에게 더욱 큰 피해를 입힐 것이다.

둘째, 인권 침해의 확대이다. 대부분의 정부가 방역 과정에서 개인 인권을 유보시켰고,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방역 독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긴급 명령이 남발되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정부 지휘 아래 무자비한 도시 봉쇄가 이뤄졌고, 한국에서도 개인 정보가 방역의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공개됐다. 코로나19가 반복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방역으로 인한 개인 인권과 민주주의 유보가 이후에도 재발할 것이다.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인권을 침해할 때, 특히 사회적 소수자들은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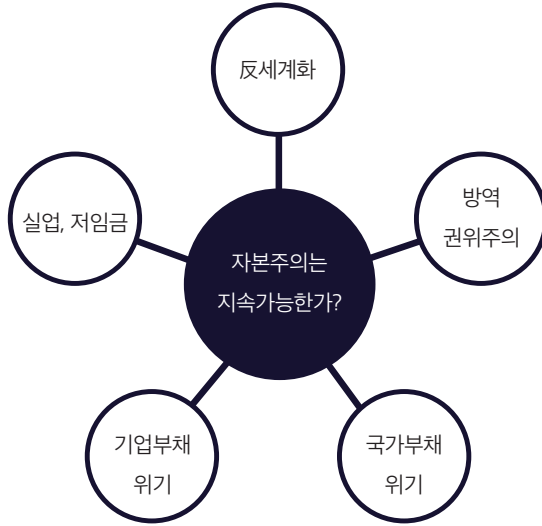
셋째, 정부의 빚더미이다. IMF의 장기 국가채무 통계로 추정해보면, 2020년 주요 선진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1944년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다. 2차 세계대전 막바지와 현재가 비슷한 상대란 것이다. 그런데 상황은 현재가 더 안 좋다. 1940년대 국가채무 비율은 급속도로 높아졌다, 다시 급속도로 낮아진 반면, 2020년 국가채무 비율은 이미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앞으로 오랫동안 낮아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1940년대에는 산업혁명으로 생산성이 초고속으로 상승하던 시기라, 전쟁이란 외부 충격이 사라지자 경제가 빠르게 좋아졌다. 폭격으로 생산성 낮았던 기존 설비들이 모두 사라진 것도 역설적이지만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현재의 국가채무 상승은 기저질환이 전염병으로 악화된 것과 비슷하다. 빚더미를 짊어진 선진국 정부들은 이전 같은 방식으로 경

제 정책을 펴기 어려울 것이다.

넷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기업부채이다. 정부만 빚더미가 아니라 기업도 빚더미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은 낮은 이자율과 풍부한 유동성을 이용해 빚으로 사업을 확장해왔다. 지난 10년 간의 세계경제 성장에는 기업부채 증가가 큰 역할을 했다. 그런데 코로나19 경제침체로 기업들은 더 많은 빚을 져야만 생존 가능한 상황에 처했다. 현재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과 정부가 기업 채권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다. 세계 주요 기업들이 모두 줄도산 직전이다. 하지만 정부가 기업채권을 대규모로 매입하는 것은 재정과 통화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업발 연쇄부도가 정부의 연쇄부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다섯째, 실업자와 비정규직의 확산이다. 미국에서는 지난 주 사상 최고치로 실업수당 신청자가 폭증했다. 아예 비교 가능한 역사적 사례가 없을 정도였다. 각국 정부가 한시적 해고규제,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실업보험 확장, 가게 긴급지원, 고용보장을 전제로 한 대출 등으로 실업률 상승을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봉쇄 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업 증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세계적 파견업체들은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 파견업체를 통해 코로나19로 호황을 보는 업종으로 대규모 일자리 이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자리는 당연히 불안정하고 임금도 낮다. 실업자는 증가하고 일자리 질은 더욱 나빠진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적으로 커질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는 현 세계질서와 경제체제의 총체적 실패를 확실하게 보여줬다. 바이러스



가 창궐한 이유부터 보건위기가 경제위기로 확장된 이유까지, 현재 사태는 이윤 추구를 절대적 목표로 작동하는 자본주의 체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야생동물을 산업화할 경우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가 다시 창궐할 것이다. 또한 보건위기, 생태위기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외부 충격에 대응할 수 없는 경제는 지속가능성을 보장받기 어렵다. 그런데 이윤 추구가 안 되면 생산 자체도 멈춰버리는 자본주의 경제는 이런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하다. 코로나19사태 이후 자본주의를 어떤 식으로든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세계 시민 모두가 깨닫고 있다.

다만, 이 모든 쟁점이 진보가 아니라 퇴행으로 수렴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자. 1930년대 독일의 대혼란은 나치즘으로 해

결되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혼란은 트럼프의 집권으로 이어졌다. 낡은 것이 사라지고 있으나 새로운 것이 나타나지 않을 때, 시민들은 진보보다 퇴행을 선택하기도 한다.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변혁운동이 성장하지 않으면 세계는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뒤로 돌아가는 길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별첨1] 각국의 재정·통화정책(2020년 3월 말 현재)



미국

통화정책

- 연방 기금금리 인하: 총 1.5%p를 인하, 거의 0에 도달
- 재할인율 인하: 1.75%→0.5%로 인하.
- 수량완화: 몇 달 내로 5,000억 달러의 재무부 증권, 2,000억 달러의 주택저당증권을 구매.
- 은행의 대출 장려: 지급준비율 규제를 없애고 자본에 대출 장려
- 국제 스와프 금리인하: 0.25%p
- 국제 스와프 체결국 확대: 한국, 호주, 싱가포르, 브라질 등
- 기업어음 매입용 기금제도: 기업어음을 구매하여 실질적으로는 기업에 대출 제공
- 프라이머리 딜러 신용공여제도: 24개 대규모 금융기관에 낮은 이자(현재 0.25%)로 대출 제공
- 레포(환매조건부 채권) 거래범위와 한도 확대: 3월 12일 기준, 5,000억 달러의 1개월물 레포와 5,000억 달러의 3개월물 레포를 운영. (사실상 레포시장에 무제한적인 화폐공급 의지를 표명)
- 머니마켓 뮤추얼펀드 지원: 은행이 머니마켓펀드로부터 증권을 사들이면, 그 증권을 담보로 연준이 은행에 자금제공
- 자산담보부증권 대출제도 재개: 소비자, 소기업에 대한 대출확대 지원
- 회사채 매입을 위한 제도 도입

재정정책(기업지원)

- 코로나 바이러스 대비와 대응을 위한 보충책정법: 백신 연구개발비 830억 달러 지출
- 기업, 주정부, 지방정부에 5,000억 달러의 대출 및 지급보증 제공
- 보건 분야에 1,500억 달러 지출
- 기업 운영업손실의 소급적용 : 5년간 소급하여 납부한 소득세 환급.

재정정책(노동자 지원)

- 가족이 우선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법: 유급병가, 실업급여에 초점 맞춘 1040억 달러 지출
- 경기부양을 위한 직불금(세금환급금): 지급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최대 1200달러 지급. 17세 미만 아이 1명 당 500달러 지급
- 실업보험: 수령기간을 잠정적으로 13주 연장하고 앞으로 네 달간 주당 600달러 추가지급, 임시직 노동자에게도 수령자격 부여
- 영양보충 지원 프로그램(SNAP) (보통 푸드 스탬프라 불림): 노동의무 삭제, 삭감 중단을 명령.
-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1,500억 달러 지원: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부담률을 6.2%p높이고 주정부에 특정한 공공지원 프로그램 비용을 제공

*미국의 재정정책, 통화정책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다음을 참고.

- 사회운동포커스 “코로나 경제위기① 미국 연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할 것인가?”
- 사회운동포커스 “코로나 경제위기② 미국 의회의 3단계 재정정책, 2조 달러의 CARES”



중국

통화정책

- 공개시장 운영으로 1조 7,000위안의 유동성 지급
- 8,000억 위안 규모의 특별재대출 신설
- 지급준비율 인하: 0.5~1.5% 인하
- 대출금 상환 연장
- 중기 유동성지원대출금리 인하(0.1%)
- 금융기관 대출우대 금리 인하(0.1%)

재정정책(기업 지원)

- 의료보험료 인하: 여력 있는 지방정부는 기업의 의료보험료 부담액 50% 인하 가능
- 사회보험료 인하

- 부가가치세 감면

재정정책(노동자 지원)

- 코로나19 방역 관련 특혜 세금정책: 방역참여 인력의 개인소득세 면제, 코로나19 통제를 위한 수입품은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면제
- 지방정부별 지원: 광동성은 자동차 구매자에게 보조금 지급, : 여러 도시에서 지역상점과 식당에서 쓸 수 있는 쿠폰을 지급



이탈리아

재정정책(기업 지원)

- 3월 납부 시한인 부가가치세 및 여타 세금, 보험료 등 5월로 연기
- 중소기업 부채상환을 2020년 9월까지 유예,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 영업중단 피해 경감을 위해 임대료 60% 세액공제

재정정책(노동자 지원)

- 자영업자, 농업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지급(600유로)
- 12세 미만 자녀 돌봄 휴가 15일 추가 (급여의 50% 보장) 또는 육아 보너스(바우처) 지급.
- 장애인 피부양인이 있는 노동자 재택근무 허용
- 3월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특별 보상금 지급(100유로)
- 유급 휴가 12일 추가
- 확진자, 자가격리자 병가 처리
- 60일간 경영상의 이유로 집단 및 개별 해고 금지.



프랑스

재정정책(기업 지원)

- 국가, 프랑스은행 신용보증지원
- 공급업체-고객사 분쟁 중재 지원
- 국가 및 지방정부 발주 계약에 대해 지연에 대한 벌칙 부과 없음

재정정책(노동자 지원)

- 부분실업 프로그램 적용을 간소화하고 강화하여 고용 유지
- 회사가 임금총액의 70%(또는 실수령액의 84%)지급.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100%지급
- 경영상 이유로 해고금지
- 1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유급 돌봄 휴가



독일

재정정책(기업 지원)

- 독일재건은행 (KfW)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민간 기업 지원.

재정정책(노동자 지원)

- 조업단축으로 인한 임금손실분 보전제도 요건 완화(사업장 전체 종업원 30%이상→10%로 조정)
- 고용청이 임금의 60%를 지원. 자녀가 있는 노동자는 67% 지원
- 실업수당 및 실업 급여 수령 시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청 가능



덴마크

재정정책(기업 지원)

- 세금 및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30%이상 감소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대출 보증

재정정책(노동자 지원)

- 코로나19 영향으로 노동자의 30% 또는 50인 이상 휴업 시 정부가 급여의 75%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사용자가 보전. 시급제 노동자의 경우 정부가 90%부담.
- 코로나19 감염 치료 또는 자가격리시 유급 병가
- 프리랜서, 자영업자 휴업 시 소득 지원



스웨덴

재정정책(기업 지원)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병가기간(3월 11일~5월 31일)에 임금 지급을 중단하는 대신 중앙정부가 상병수당 지급
- 스웨덴 공공의료기관, 보건복지위원회, 의약품청 추가 자원 투입
- 병가기간 사용자 사회보험 기여분, 사전 납부세 등 납부 유예
- 3월 16일 단기 일시해고(휴업) 도입
- 중앙은행은 기업대출 확대(5,000억 유로)

재정정책(노동자 지원)

- 단기 일시해고(휴업)시 임금 보장 (정부가 90% 지원)
- 병가에 대한 급여 정부가 부담. 자영업자도 표준화된 수당을 지급.
- 코로나19에 큰 타격을 입은 호텔, 레스토랑 노동조합은 1일 고용 노동자를 제외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새롭게 도입된 단기 일시해고 임금 보전 제도에 따라 임시 단협 체결.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 조정.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

- 순자산 매입규모 확대: 2,400->3,600억 유로
- 2020년 6월까지 긴급 장기 유동성 공급
- 금융기관 대출지원제도: 금리인하(0.25%), 한도확대(5,000억 유로)
- PEPP(Pandemic Emergency Purchase Programme, 민간 및 공공부문의 증권을 매입하는 한시적 자산매입 프로그램) 실시: 7,500억 유로 규모. 순자산 매입규모는 1.11조 유로로 확대
- 비금융 기업어음으로 CSPP(Corporate Sector Purchasing Program, 유럽중앙은행의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 적격자산 범위를 확대
- 7,500억 유로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합의: 국가 부채와 기업 부채 모두를 포함

[별첨2] 한국정부의 대책(2020년 4월 1주 현재)

재정: 고용·실업 대책 및 재난지원금을 통한 긴급생계지원

3월 17일 11.7조원의 1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 관련 정부지출은 30조원 규모로 확대됐다. 3.30 제 3차 비상경제회의의 결과에 따라 9.1조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이 7.1조원의 2차 추경과 2조원의 지자체 재정분담으로 추가 추진된다면 결과적으로 총 40조원가량의 재정이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투입된다. 이와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한 생계비 지원 소요 예산은 총 3조 2,75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고용 및 실업 대책의 측면에선 ①고용유지지원금(4~6월 휴업수당 최대 90%지원) ②실업급여 보장성강화기조 유지 ③취업성공패키지확대 지원 ④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⑤사각지대 취약계층 추가 생계지원(무급휴직·특수고용·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긴급생활안정·구직촉구수당 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요건완화, 노인일자리 활동비 先지급)을 받을 수 있다.

생계비 지원 측면에선 ①중앙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하위소득 70%, 1400만 가구 최대 100만원) ②지자체 차원의 지원금(지역별 상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은 재정건전성 및 현재로서는 기준이 모호한 지급대상범위에 따른 일회성, 공정성, 실효성, 형평성 측면의 쟁점이 있어 국회심의에서 재론될 여지가 크다. 기존에 없던 중앙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설과 그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분담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지원금 또한 조정될 수 있다.

	대상	금액	소요 예산
경기	전 도민	1인당 10만원	1조 3,265억원
서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당 30만~50만원	3,270 억원
인천	중위소득 100%이하, 무급휴직자등	20만~50만원	1,220억원
부산	소상공인, 자영업자	1인당 100만원	1,856억원
대구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당 50~90만원	2,927억원

광주	실직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당 30만~100만원	1,100억원
울산	중위소득 100% 이하	1인당 10만원	330억원
대전	중위소득 50~100%	가구당 최대 70만원	1,400억원
강원	소상공인, 기초연금 수급자	1인당 40만원	1,200억원
충남	소상공인, 실직자	1인당 100만원	1,500억원
전남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당 최대 50만원	1,280억원
전북	교회, PC방 등 행정명령 대상 시설	시설당 70만원	100억원
경북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당 50~80만원	1,646억원
경남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당 30~50만원	1,656억원
			3조 2,750억원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정보 확인 및 지급신청 가능

통화: 금융시장 안정화방안을 통한 기업 부문 유동성 공급과 금융시장안정화 장치 마련

3월 24일 발표된 '코로나 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은 기업자금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 유지를 위한 100조원+@ 규모의 정책수단이 담겨있다.

58.3조원 규모로 추진되는 기업자금 지원 측면에선 규모별·업종별 지원을 시행한다. 중견기업의 경우(필요시 대기업까지 확대) 대출·보증·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경우 거기에 더해 만기/이자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업종·분야별(항공·교통, 관광·공연, 수출, 해운)로는 피해규모에 따른 추가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41.8조원 규모로 추진되는 금융시장 안정 유지 측면에선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지원(31.1조원)과 증권시장안정을 위한 펀드 조성(10.7조원)이 시행된다. 한국은행이 3월 26일 발표한 4~6월 동안의 무제한 RP매입 방침은 이러한 금융시장안정화방안의 효과적인 집행을 뒷받침 하는 성격이 크다.

코로나19 사태의 원인과 전망 전염병 발발부터 경제위기 확대까지

발행. 2020.4.6.

펴낸곳. 사회진보연대

전화. 02-778-4001~2

팩스. 02-778-4006

홈페이지. www.pssp.org

메일. pssp4001@gmail.com

가격. 5000원

입금 계좌. 기업은행 057-034981-04-017 (사회진보연대)

구입 문의. pssp4001@gmail.com